

충남리포트 제80호 2013. 07. 10.

# 우리나라 직접지불제 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

강 마 야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kmaya@cdi.re.kr)

여 민 수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연구원, ch62minsu@cdi.re.kr)

## 목 차

### < 요약 >

1. 직접지불제와 문제제기
2. 우리나라 농업·농촌 실태
3. 직접지불제 현황
4. 직접지불제 문제점 및 대안
5. 시사점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제기되어왔던 직접지불제의 현황 및 문제점, 농업·농촌의 정책적 수요 검토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직접지불제와 문제제기, 둘째,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실태 분석, 셋째, 직접지불제 현황, 넷째, 직접지불제 문제점 및 대안, 마지막 시사점 순으로 정리하고자 함.
- 우리나라 농업과 농가경제의 현 실태는 다른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경로와 법칙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타 산업과 달리 성장속도가 느리고 전체 산업 부가가치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수입개방 가속화로 농가교역조건 지수는 날로 악화되고 있음.
- 아울러 농촌생활의 현재 상황은 그간 많은 투자로 인해 외형적 하드웨어 생활환경은 개선되었으나 마을공동체 기능 복원, 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소프트웨어 생활환경은 여전히 부족하고 각박해지고 있다고 체감함.
- 하지만 농업인, 도시민 모두가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과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공공재 보상 성격으로서 관련 정책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
- 현재 다양한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의 불명확, 적은 예산규모로 인한 농가소득 보전 효과 미비, 다양한 품목과 다양한 영역 지원의 한계, 상호준수조건 미준수 등 종합적 관리시스템 미흡, 지역별 특성을 반영치 못한 일률적 집행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직불제가 소모성 지원, 일방적 지원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하고 농가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이라는 슬로건이 아닌 이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인정하는 측면에서 농정 비전 및 목표의 수립이 선행되고 그 수단 중 하나로서 직불제를 활용해야 할 것임.
- 농업인들 역시 제도의 목적에 상응하는 상호준수조건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스스로 마을공동체 내에서 자생·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 1. 직접지불제와 문제제기

## 1) 직접지불제의 개념

### ◆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s program)<sup>1)</sup>란 무엇인가?

#### ○ 용어의 등장 배경

- 농업 생산자에 대한 지원이 정부 재정에 의한 직접적 지불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임.
- 전통적 가격지지 정책방식은 시장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농업 생산자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반면, 직접지불은 정부재정으로부터 생산자에게 소득이 직접 이전된다는 데서 서로 다름.

#### ○ 협의의 직접지불제

- 정부가 기존의 시장가격 지지정책 대신 직접적인 소득 지지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적정가격의 보전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 농업인 소득안정,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위해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공공재정에 의해 생산자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정부지원에 의한 생산·소비·무역에 대한 경제적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함(농식품부 정의).

#### ○ 광의의 직접지불제

- 최근에는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의 수행으로 생산되는 공공재에 대해 정부가 농업인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개념, 즉 공익형 직불금으로 전환되고 있음.

1) 기존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 직불금과 직불제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직불금은 단순히 직접 지원하는 현금성 수단을 일컫고, 직불제는 그러한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본문에서는 서술 내용에 따라 직불제와 직불금으로 각각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로 함.

○ 직접지불제의 분류

- 공익적 기능 제고, 소득안정, 구조개선촉진 목적으로 구분하여 이에 맞는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음([표 1] 참고).
- 분야 또한 논, 밭, 축산으로 나뉘서 대상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중임.

[표 1] 직접지불제 분류

분야 목적	논	밭	축산
공익적 기능 제고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고정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친환경 농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 안전축산)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소득 특 정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변동직접지불금)	FTA피해보전 직접지불제(수산 포함)	
		밭농업 직접지불제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12년 시범실시)		
구조 개 선 촉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FTA폐업지원제(수산 포함)	
기타직불성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축산물 수급관리사업(송아지생산안정사업),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안전공제보험, 취약농가 인력지원, 농어업인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2012)

주 : 정부의 분류 방식을 일부 수정 · 보완하여 재구성

## ◆ WTO에서는 직접지불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 ○ WTO와 직불제2)

- WTO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은 시장지향적 농산물 무역질서의 확립을 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회원국들은 이에 부합하는 직불제를 국내 정책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중임([표 2]참고).
- WTO에서 요구하는 직불제는 총AMS(Aggregate Measurement for Supports) 감축의무에서 면제되는 국내정책(Green Box)로서 구성요건과 유형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됨.
- 시행가능한 프로그램 유형은 정부서비스, 공공비축 및 국내식품지원, 생산비연계 직접지불 등으로 요건만 충족시키면 다양한 형태로 직접지불 실시 가능함.

[표 2] WTO 하에서의 직접지불제 요건 및 유형

기본요건 (fundamental requirement)	무역왜곡효과의 최소화 생산효과 최소화	
세부기준 (basic criteria)	소비자로부터 소득이전이 없는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한 정책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불가	
시행가능 프로그램 유형 (government service programmes)	정부서비스	연구, 방역·방제, 교육·훈련, 지도, 검사, 유통촉진, 하부구조개선 등
	공공비축 및 국내식품지원	공공비축
		국내식품지원
	생산비연계 직접지불	비연계소득보조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자연재해 구호지원
		생산자은퇴지원 구조조정
		자원폐기계획 구조조정
		투자지원 구조조정
		환경보전사업
		지역지원사업
		기타

자료 :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2

주 : 시행가능 프로그램 유형은 허용보조 항목(Green Box)에 해당하는 것으로 WTO협정문을 재정리, 분류

2) 자료 :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2

(AGREEMENT ON AGRICULTURE, DOMESTIC SUPPORT: THE BASIS FOR EXEMPTION FROM THE REDUCTION COMMITMENTS,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4-ag\\_01\\_e.htm](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4-ag_01_e.htm))

## 2) 직접지불제에 대한 문제제기

- 직접지불제를 포함한 농업보조금에 대한 그동안의 비판과 평가
  - 그동안 직접지불제를 포함한 농업의 각종 보조금에 대한 시선은 예산규모 및 배분에서의 형평성, 타산업과의 형평성, 농업보호론 및 정책개입의 정당성, 농가경제 현실, 선진국의 동향은 어떠한지 등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게 사실임([표 3]참고).

[표 3] 직접지불제를 포함한 농업보조금에 대한 비판

구분	내용
예산규모 및 배분 측면	경쟁력이 취약하고 사양 산업화되고 있는 농림수산물 부문에 대한 과도한 예산 배분은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기존에 농업보조금은 참여정부 119조원을 비롯하여 막대한 자금들이 농업·농촌 부문에 많이 투입되지 않았는가?
	농림어업부문의 국내총생산액이 전체 국내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물분야 예산을 증액시키는 곤란하지 않는가?
타산업과의 형평성	1차 산업인 농업이 2, 3차 산업과 동일하게 균형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농업보호론 및 정책개입 정당성	왜 농업·농촌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만 하는가?
	농업보호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가? 농업보호를 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는?
	농업·농촌이 자생력을 갖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시장논리에 따라 맡겨두는 것이 낫지 않나?
	오히려 정부가 정책개입을 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수동적으로 만들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의 정책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기존에 다방농민, 아스팔트농민으로 얼룩지어진 농업보조금에 대한 불편한 시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이렇기 때문에 직불금을 포함한 농업보조금은 축소해야 하지 않는가?
	직불금을 포함한 농업보조금이 왜 필요한 것인가?
농가경제 현실과 선진국 동향	필요하다면 어떤 원칙을 세우고 이행조건들을 만들어야 하나?
	우리나라 농업농촌 현실, 농가경제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보조금 및 직불금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지금 세계경제가 모두 같이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는 아닌가?
	선진국은 농가들에게 어떤 장치를 마련해 주고 있고 특히 강조하고 있는 직불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2. 우리나라 농업 · 농촌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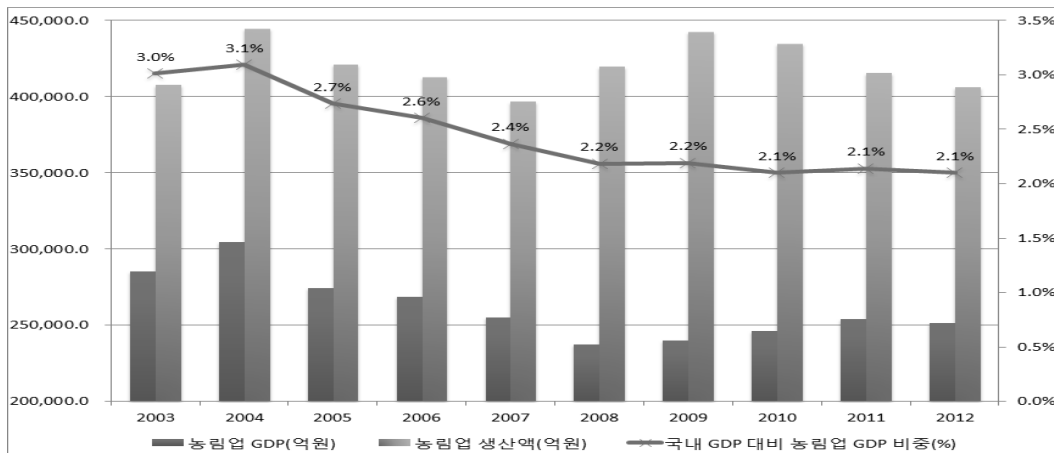
- 이와 같이 직접지불제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 실태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함

### 1) 우리나라 농업과 농가경제 실태

#### ◆ 농업의 위상

- 국내 GDP 대비 농림업 GDP 비중은 '03년 3%에서 '12년 2.1%로 감소 ([그림 1]참고)
- 농림업 GDP와 농림업 생산액과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는 중임.
  - 국내 GDP 대비 농림업 GDP 비중은 '04년 3%를 기록한 이후 2%대 비중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감소, 정체 상태를 보임.
  -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페티-클라크 법칙 등으로 발표된 바 있음.

[그림 1] 국내 GDP와 농림업 GDP 비교



자료 : 1. 국민계정, 각연도, 한국은행  
 2. 농림업생산지수, 각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주 : 1.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



- 1인당 GDP 대비 1인당 농림업 GDP 비중은 '03년 41.7%에서 '12년 36.1% 감소
  - 농업소득은 '03년 13,064천 원에서 '11년부터 10,000천원 대 이하를 기록하며 본 지표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표 4] 참고).
  - 농가경제잉여도 '11년 들어서면서 2,000천 원대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됨.

[표 4] 1인당 GDP와 농업인 1인당 GDP 비교

(단위 : 천 원,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인당 GDP(A)	19,401	20,532	20,876	21,324	22,218	22,190	22,301	23,745	23,858	23,938
농업인 1인당 농림업GDP(B)	8,090	8,926	8,000	8,130	7,802	7,446	7,710	8,040	8,583	8,636
B/A	41.7	43.5	38.3	38.1	35.1	33.6	34.6	33.9	36.0	36.1
농업인 1인당 농림업생산액	11,557	13,025	12,268	12,501	12,121	13,169	14,205	14,209	14,027	13,962
농가당 농업소득	13,064	14,374	13,722	13,725	11,523	10,215	9,987	10,098	8,416	8,586
농가경제잉여	3,478	5,140	4,476	4,361	4,340	3,620	4,366	4,449	2,155	3,331

자료 : 1. 장래인구추계&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통계청

2. 국민계정, 각연도, 한국은행

3. 농가경제조사, 각연도, 통계청

주 : 1.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

2. 농가경제잉여란 농가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을 차감한 잔액으로서 연간 농업생산활동 및 농업외소득활동 결과로부터 얻은 잉여를 말하며 농가경제의 흑자 또는 적자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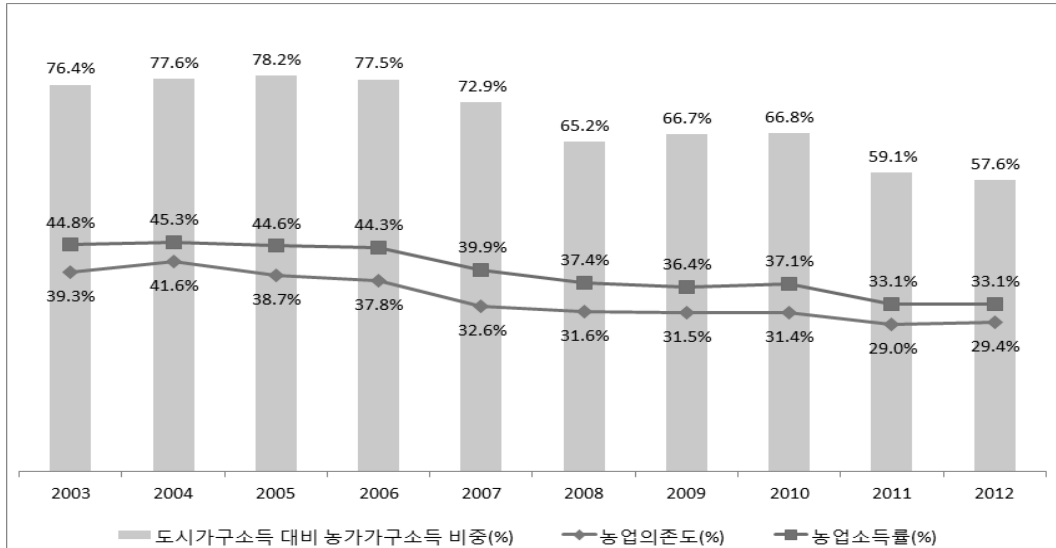
## ◆ 농가경제 현실

- '07년 이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상대적 감소 추이가 지속되고 있고 '12년에는 57.6% 기록([그림 2] 참고)
  - 농업의존도는 '03년 39.3%에서 '12년 29.4%로 하락, 원인으로는 농가 소득에서 농외소득,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상대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임.

- 농업소득률은 '03년 44.8%에서 '12년 33.1%로 하락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농업경영비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기인함.

[그림 2] 도시경제 대비 농가경제 변화

(단위 : 천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도시가구 근로자소득	43,459	44,554	45,304	46,927	48,586	49,519	47,605	48,092	49,022	50,713
농가소득	33,213	34,595	35,426	36,356	35,402	32,299	31,734	32,121	28,988	29,191
농업소득	13,064	14,374	13,722	13,725	11,523	10,215	9,987	10,098	8,416	8,586
농업총수입	29,176	31,758	30,773	31,012	28,905	27,347	27,416	27,221	25,439	25,953

자료 : 1. 가계동향조사, 각연도, 통계청

2. 농가경제조사, 각연도, 통계청

주 : 1.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

2. 도시가구소득은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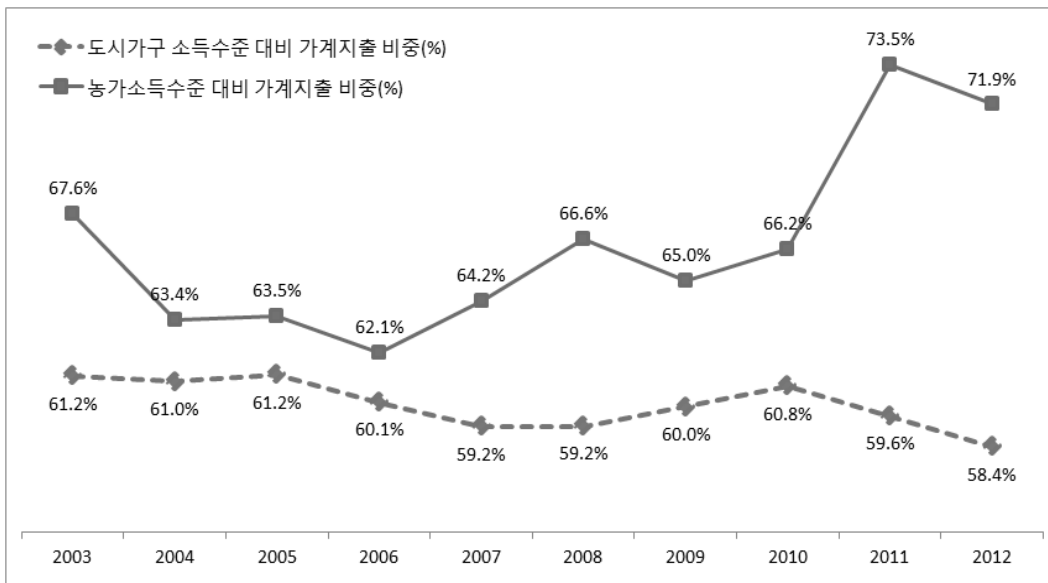
3. 농업의존도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4. 농업소득률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도시가구 소득과 농가 소득수준 대비 가계지출 비중은 '10년 이후 큰 격차 ([그림 3]참고)

- '03년 6.4%p 격차를 보이다가 '11년에는 약 14% p까지 벌어짐.
- 농가소득 수준에서 가계지출 비중은 매년 높아지는 데 반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지출 비중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특징을 보임.

[그림 3] 도시 및 농가 소득수준 대비 가계지출 비중



자료 : 1. 가계동향조사, 각연도, 한국은행&통계청

2. 농가경제조사, 각연도, 통계청

주 : 1.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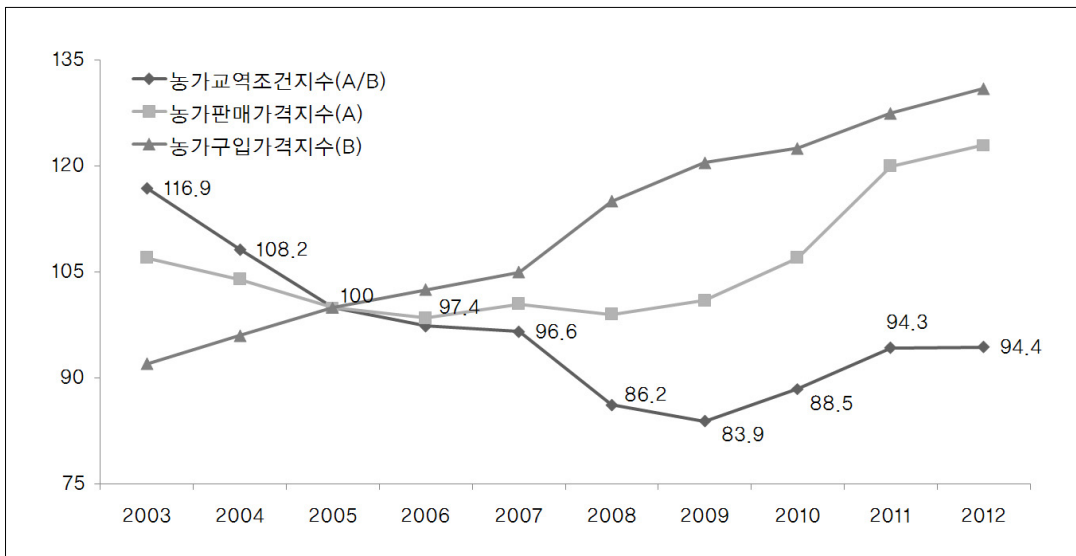
2. 도시가구 소득은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 농가교역조건지수는 하락 추세, '07-'09년에 악화 심화, 이후 소폭 회복 중 ([그림 4]참고)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03년 이후 계속 하락하여 '07년 이후부터 회복하여 상승
- 농가구입가격지수는 비료비, 영농광열비, 사료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05년 기준으로 농가판매가격지수와 역전 현상이 발생함.
- '03년 116.9이던 농가교역조건지수는 '09년 83.9까지 계속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소폭으로 회복하면서 '12년 94.4를 기록하고 있음.

- 농산물 가격상승률보다 농가가 구입하는 물품가격상승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농가의 채산성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향후 시장개방과 영농자재비 상승으로 농가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농림축산식품부, 2013).

[그림 4] 농가교역조건지수 추이



자료 :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각연도,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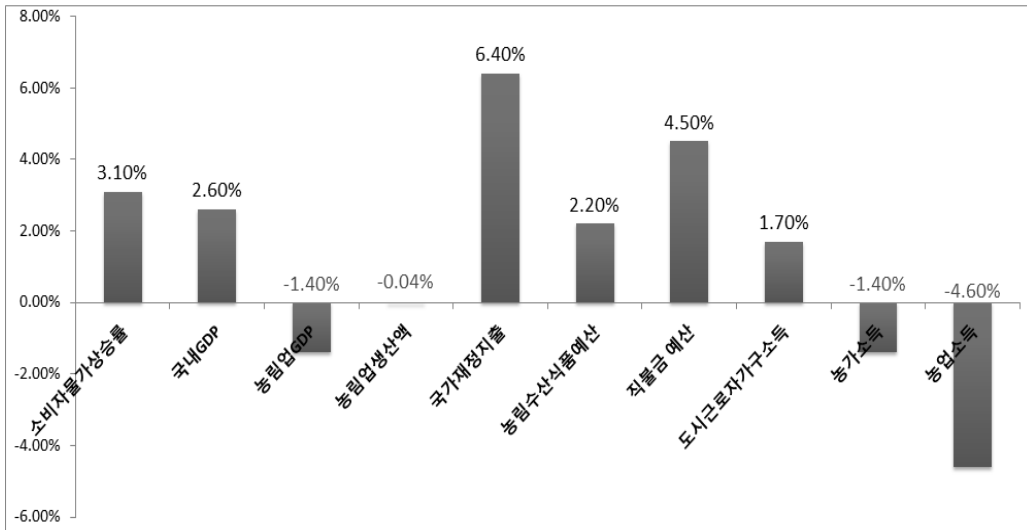
주 : 1. 2005=100로 디플레이트

2. 농가교역조건지수란 농가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산물과 농가가 구입하는 농기자재 또는 생활용품의 가격 상승폭을 비교하여 농가의 채산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됨.

- 국가재정지출 연평균증가율이 6%대를 넘는데 반해 농업관련 지표들은 마이너스 기록([그림 5] 참고)
  - 각종 경제지표의 '03년부터 '12년까지 연평균증가율을 비교해 본 결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10%, 국내총생산(GDP)는 2.60%, 국가재정지출은 6.40%를 보임.
  - 반면 농림업GDP는 △1.40%, 농림업생산액은 △0.04%,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예산은 2.20%, 직불금 예산은 4.50%에 그치고 있음.
  - 지난 10여 년 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1.70%를

기록한 반면 농가소득은  $\Delta 1.40\%$ , 농업소득은  $\Delta 4.60\%$ 를 기록하며 매년 농가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그림 5] 각종 지표별 연평균증가율



자료 : 1. e-나라지표 : 농업일반 예산 및 기금내역, 각연도, 농림수산물부(자체 집계)

2. 농가경제조사, 각연도, 통계청

3. 가계동향조사, 각연도, 한국은행&통계청

5. 소비자물가지수, 각연도, 통계청

5. 국민계정, 각연도, 한국은행

6. 농림업생산지수, 각연도, 농림축산식품부

7.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대한민국 정부

주 : 모든 지표는 소비자물가지수(2010=100)으로 디스플레이

## 2) 우리나라 농촌 생활환경 실태

### ◆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

- 지역생활 중 소득원 및 일자리 환경 부분에 대한 불만족도 높은 것으로 응답([표 5] 참고)

- 주거 및 이웃환경, 쓰레기 등 환경 부문을 긍정적 우선순위로 인식함.

- 소득원 및 일자리 환경, 문화·체육·여가 환경, 보건·의료 환경 부문에서는 부정적 우선순위로 보고 있음.

[표 5] 지역생활 만족도 현황

(단위 : %)

〈긍정적 응답 우선순위〉	응답합계	〈부정적 응답 우선순위〉	응답합계
주거환경	50.8	소득원/일자리 환경	48.6
이웃환경	49.6	문화체육여가환경	38.6
쓰레기/환경	34.3	보건의료환경	37.5
대중교통환경	28.8	교육환경	35.2
보건의료환경	25.1	대중교통환경	34.9
문화체육여가환경	15.7	쓰레기/환경	22.6
교육환경	15.4	주거환경	15.6
소득원/일자리 환경	12	이웃환경	7.1

자료 : 농촌생활지표조사, 2011,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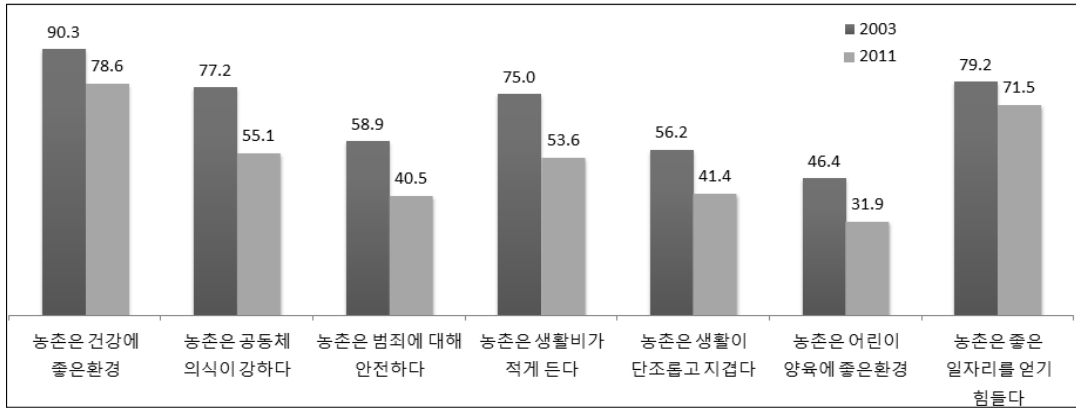
주 : 긍정적 부분을 “매우 만족 및 만족” 응답 항목의 합, 부정적 부분을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의 합으로 보고 우선순위별 항목을 내림차순으로 나열함.

○ 농촌의 가치인식 중 좋은 자연환경과 공동체 의식 환경에 긍정적 반응 ([그림 6] 참고)

- 건강에 좋은 환경, 일자리를 얻기 힘든 환경, 강한 공동체의식을 가진 환경 순으로 찬성 응답률이 높았음.
- 반면 치안 환경, 보육 환경, 단조로운 생활 환경에 대해서는 다소 찬성응답률 저조하게 나타남.
- ‘03년 대비 ‘11년 인식의 변화로 공동체 의식에 대해 환경과 생활비가 적게 드는 환경에 대한 찬성 응답이 다소 떨어지고 있음.
- 일자리가 부족한 환경에 대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크지 않음으로 미루어 볼 때 농촌에서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우선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보임.

[그림 6] 농촌의 가치인식 변화 (찬성 응답)

(단위 : %)



자료 : 농촌생활지표조사, 각연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주 : 각 항목별 찬성 응답("그렇다")결과를 우선순위별로 나열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식변화 차이 파악함.

○ 마을공동체 참여의식에 대해서는 소속감은 긍정적, 마을 관련 일에 동참은 부정적([표 6 참고])

- 마을주민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 마을 사정에 대한 인지 부분을 긍정적 우선순위로 보고 있음.
- 반면 집보기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음과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우선순위로 보고 있음.

[표 6] 마을공동체 참여의식 현황

(단위 : %)

〈긍정적 응답 우선순위〉	합계	〈부정적 응답 우선순위〉	합계
마을의 일원이라는 소속감	58.5	집 보기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음	35.6
마을 사정에 대한 인지	50.7	마을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22.1
마을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느낌	49.7	노력 여하에 따라 마을의 발전에 기여 가능	21.4
마을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40.7	이웃 문제에 관심이 많음	20.8
이웃 문제에 관심이 많음	39.8	마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일의 인지	20.7
마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일의 인지	39.4	마을 주민 공동의 운동을 가지고 있음	19.1
마을 주민 공동의 운동을 가지고 있음	36.1	마을 사정에 대한 인지	17.8
노력 여하에 따라 마을의 발전에 기여 가능	32.9	마을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느낌	10.2
집 보기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음	30.0	마을의 일원이라는 소속감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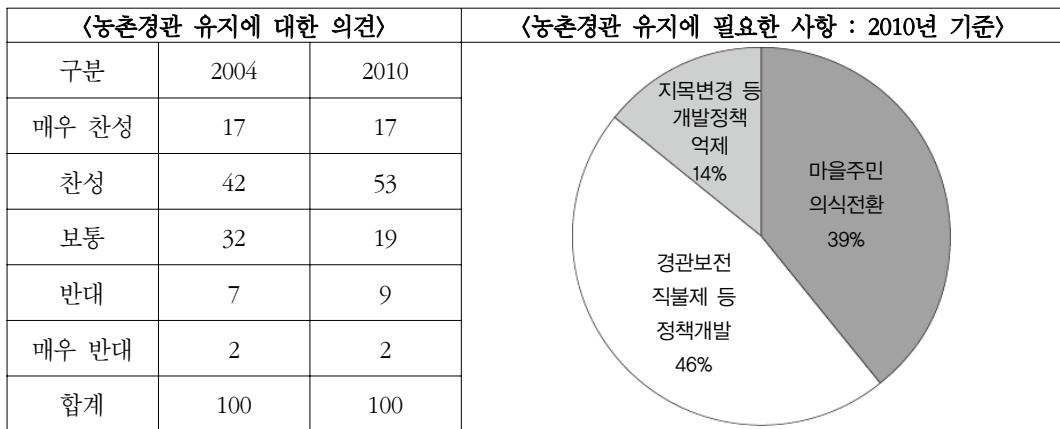
자료 : 농촌생활지표조사, 2011,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주 : 긍정적 부분을 '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 응답 항목의 합, 부정적 부분을 '매우 아니다 및 아니다' 응답 항목의 합으로 보고 우선순위별 항목을 내림차순 나열함.

- 농촌경관 유지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 이를 위하여 관련 정책개발 가장 필요([그림 7] 참고)
- 농촌경관 유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을 차지함.
  - 농촌경관 유지에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경관보전직불제 등 정책개발(46%), 마을주민의식 전환(39%), 지목변경 등 개발정책억제(14%) 순으로 나타남.

[그림 7] 농촌경관 유지에 대한 의견 및 필요사항

(단위 : %)



자료 : 농촌생활지표조사, 각연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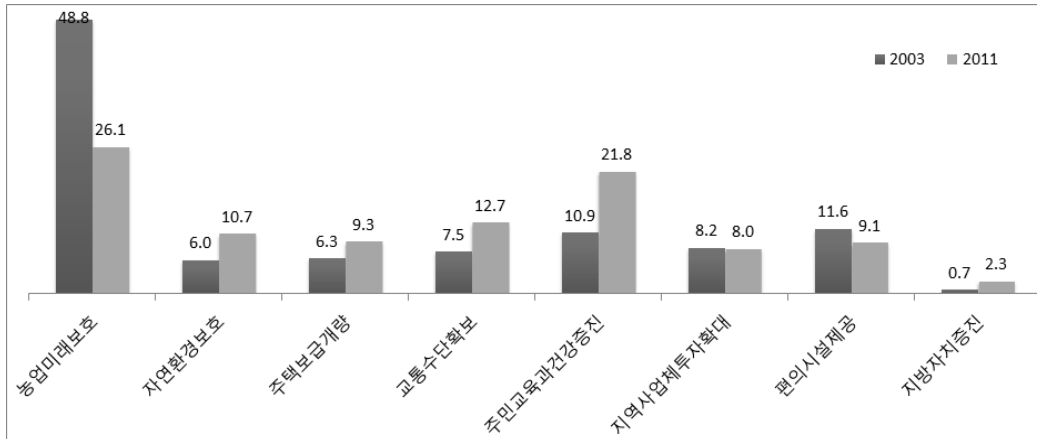
### ◆ 향후 농촌정책 수요

- 정부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농촌정책은 농업미래보호 관련 정책수요 감소, 농촌환경·교통·주택·교육·건강 등 복지 정책수요 증가([그림 8] 참고)
- '03년 대비 '11년 조사 결과 감소한 정책수요는 농업미래보호, 편의시설제공, 지역사업체투자 분야로 나타남.
  - 반면 증가한 정책수요는 자연환경보호, 주택보급개량, 교통수단확보, 주민교육과 건강증진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정부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농촌 정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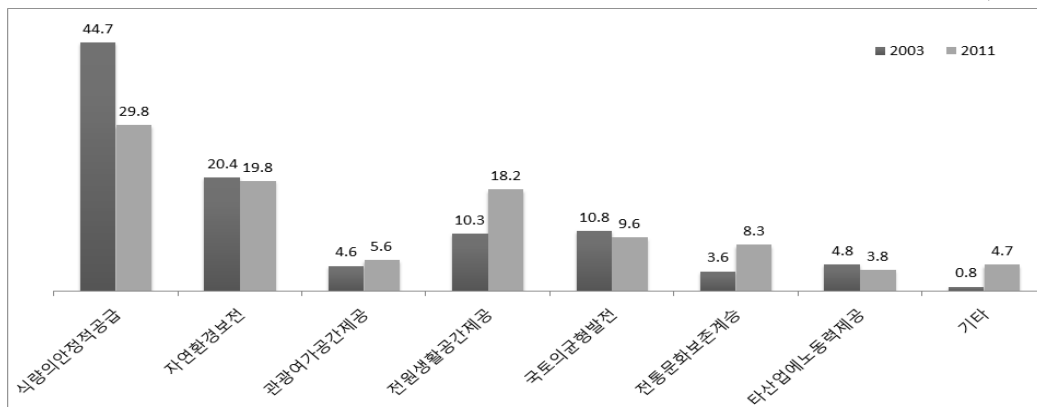


자료 : 농촌생활지표조사, 각연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농업·농촌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서 식량안보는 감소, 전원생활 공간 제공 및 전통문화 보존계승 분야는 증가([그림 9] 참고)
  - '03년 대비 '11년 전원생활 공간제공, 전통문화 보존계승 등에 대한 인식변화 응답율은 증가
  - 반면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의 균형발전, 타산업에 노동력 제공 등에 대한 인식변화 응답율은 감소

[그림 9] 농업·농촌 역할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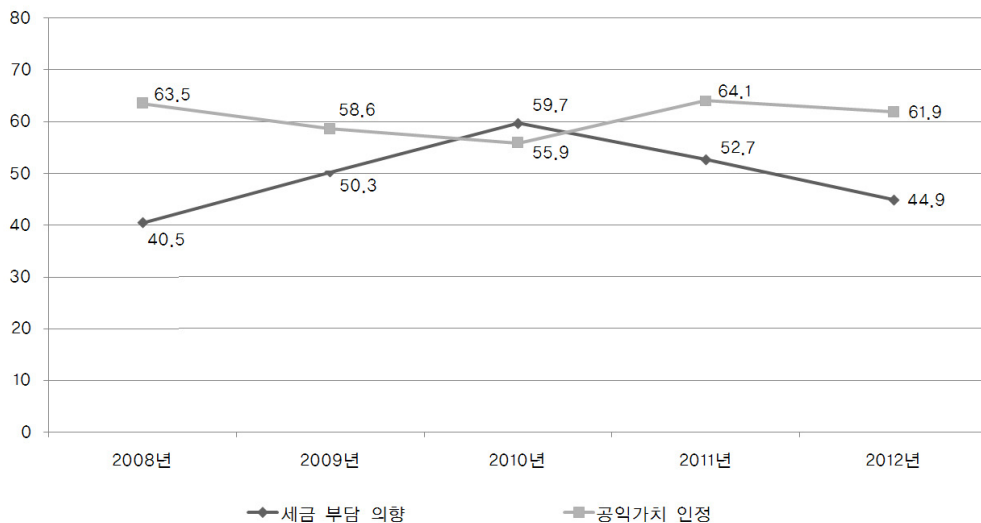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농촌생활지표조사, 각연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도시민의 경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찬성 의견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세금 부담 의향에는 저항감이 있는 것으로 조사 ([그림 10] 참고)
-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국가 세금 부담으로 연결하는 데에 대한 저항감은 정책에 대한 불신과 신뢰도가 저하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10] 도시민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견해(찬성 의견)



자료 : 김동원 외(2012)

### 3. 직접지불제 현황

#### 1) 직접지불제 유형별 현황<sup>3)</sup>

- 목적에 따라 크게 공익형 직접지불, 소득안정형 직접지불, 구조개선촉진형 직접지불로 나뉘고 있고 다음과 같이 목적 중심의 내용으로 소개

#### ◆ 공익형 직접지불

-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고정직접지불금)<sup>4)</sup>
  - 오랜 기간동안 시행해 오던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여 가격과 수급을 시장에 맡기는 양정개혁 일환(공공비축제로 전환 등)으로 '05년 도입되었으며 고정직접지불 부분은 2001년 도입된 논농업 직불제를 모태로 하여 개편 시행 중임.
  - 당시 농가소득과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보조 형태로 설계됨.
  - 쌀의 생산 및 가격과 상관없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 휴경지 포함한 논농업 이용된 농지법상 농지가 대상임.
  - 식량자급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 당초 목적이었으나 농가의 소득안정 목표를 추구하는 변동직불금 개념과 혼동, 오해 발생하고 있음.

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3)

주 : 직불금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나머지 직불성 사업은 소개 생략함.

4) 쌀 고정직불금은 농가의 소득안정 목적보다는 공익형 목적에 더 주안점을 둔 직불금이지만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 상에는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대상으로 농가의 소득 및 생산안정화 목표'라고 표기, 이 부분은 농업인과 일반 도시민들이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에 대해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때 본문에서는 공익형으로서의 쌀 고정직불금, 소득안정형으로서의 쌀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함.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축산 포함)

- 친환경농업(축산)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 장려 및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직불제로서 친환경농업은 '99년 시행, 친환경축산은 '09년 시행중임.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농업의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경지율 22% 이하, 경사도 14% 이상)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직불제로서 '04년부터 시행중임.
- 이행조건은 첫째, 농지관리의 의무, 둘째, 마을공동기금조성의 의무, 셋째, 마을활성화 실천활동의 의무로서 이행조건의 준수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수적 요소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05년부터 시행 중인 직불제임.
- 대상작물은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에 한하며 상품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작물은 제외함.

◆ 소득안정형 직접지불

○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변동직접지불금)

- DDA협상/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직불제임.

- '03년 예산사업으로 도입되었으나 '04년부터 기금으로 운영됨.
- 해당연도의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함.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함.

○ FTA피해보전 직접지불제

-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04년(한·칠레 FTA)부터 시행된 직불제임.
-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대상 품목으로 설정함.
- 한·미FTA가 발효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한우와 송아지에 대해 FTA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제도가 시행된 지 9년 만에 첫 발동하였음.

○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 '07년 한·미FTA 협상 타결 후 피해보완대책의 중장기 핵심과제로 도입이 결정되어 '09년부터 도상연습을 실시하며 도입 검토해 온 직불제임.
- '12년 정치권의 요구로 결정된 고추·마늘 등 19개 품목에 지급하는 발농업직불제 도입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 현재 '14년 도입 예정인 농업수입보장보험으로 기능 이관하는 방안 검토 중임.

○ 발농업 직접지불제

- 생산량 감소, 경영비 증가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하기 위해 도상연습을 거쳐 '12년 시

작한 직불제임.

- 동계작물(보리, 밀, 마늘, 조식료, 유채, 양파, 대파, 감자 등), 하계작물(조, 수수, 메밀, 잡곡, 콩, 팥, 녹두, 조식료, 땅콩, 참깨, 고추, 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 죽파 등) 등 19개 밭작물 대상으로함.

#### ◆ 구조개선촉진형 직접지불

#####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상업적 영농에서 은퇴하는 고령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써 '97년 시행했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음.

##### ○ FTA폐업지원제(수산 포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어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04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임.

##### ○ 이상 직접지불제 유형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의 [표 7]과 같이 요약함

우리나라 직접지불제 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

[표 7] 우리나라의 직접지불제 유형별 현황 요약

목적	직불제명	도입시기	대상(농업인,농지)	지원내용(단가, 기준, 기간 등)
공익형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고정직접지불금)	2005년	논농업 실 정작자 농지형태 및 기능 유지 하는 농지	- 지급단가 : 농업진흥지역 농지 기준 · 안의 농지 ha당 746천원 · 밖의 농지 ha당 597천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1999년	친환경농업 인증 및 실천 농업인	- 지급단가 및 기간 : 인증별 3년에서 5년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천원, 저농약 217천원(무저농약 : 3년, 유 : 5년간)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천원, 저농약 524천원 - 지급상한면적 : 0.1 ~ 5.0ha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 안전축산)	2009년	친환경축산물, HACCP농 장지정 받은 농업인	- 지급단가 및 기간 : 최대 3년간 · 한우: 유기 17만원/마리, 무항생:6.5만원/마리 · 우유: 유기 50원/L, 무항생 10원/L · 유기돼지 1만6천원, 육계 200원, 오리 400원 - 지급한도 : 20백만원/연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004년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 불리한 지역 농가 경지율 및 경사도를 해당 토지	- 지급기준 : · 육지 : 경지율 22%이하, 경사도 14%이상 농지 면적 50% 이상 법정리(도시 모두 해당) - 지급단가 : 논밭과수원 50원/m <sup>2</sup> , 초지 25원/m <sup>2</sup> - 지급하한면적 : 농가당 0.1ha 이상 - 필수이행 :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마을활성화 실천의무 1개 이상 이행 - 지급제한 : 쌀 고정직불금 대상 토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2005년	경관형성, 유지, 개선위한 작물 재배 가능 농가	-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 만원/ha, 활동비 15만원/ha - 지급제한 : 쌀고정·친환경농업·조건불리 직불금 지원 대상 농지
소득 안정형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변동직접지불금)	2005년	쌀 고정직불금 요건 충족 (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 농약 및 화학 비료의 기준 준수)	- 지급단가 : $[(\text{목표가격} - \text{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times 85\%]$ - 고정직불금 단가
	FTA피해보전 직접지불제	2004년	관세감축 또는 철폐로 인한 피해예상되는 품목 지원대상 품목 생산 농 어업인	- 지급단가 : 산출 기준 $\times$ 지급 단가 $\times$ 조정 계수 (산출기준 : 대상품목 면적, 전국생산량을 기초로 함) - 지급한도액 :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
	발농업 직접지불제	2012년	19개 품목 재배하고 있는 대상토지 발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대상품목 : 19개 품목(동계, 하계 작물) - 지급단가 : 품목 재배면적 당 400천원/ha - 지급상한면적 : 농업인(4ha), 법인(10ha) - 지급제한 : 쌀고정친환경농업조건불리·경관보전 직불금 지원 대상 농지
구조 개선 촉진형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1997년	65~70세의 농업인 벼농사 10년 이상 경력 (논, 밭, 과수원)	- 지급단가 : ha당 3,000천원, 월 250천원/ha - 지급기간 : 최대 10년 - 사용용도 : 고령농업인 생활자금 등
	FTA폐업지원제 (수산 포함)	2004년	관세감축 또는 철폐로 인한 피해예상되는 품목 지원대상 품목 생산 농어 업인	- 지급단가 : 1천m <sup>2</sup> 이상의 철거·폐기 면적 $\times$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times$ 3년 - 지급한도액 : 없음.

## 2) 직접지불제 예산 현황

### ◆ 농림수산물식품 분야에서 직접지불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 농림수산물식품 분야 예산 중 직접지불 관련 예산 규모는 상승 중([표 8] 참고)
  - 농림수산물식품 분야 예산은 '03년 6.5조 원에서 '12년 10.4조 원으로 연평균증가율 5.3%보임.
  - 직접지불 관련 예산은 '03년 6,432억 원에서 '12년 1.6조 원으로 연평균 11.3% 증가하고 있음.
- 직불금 예산과 직불성 예산으로 구분했을 때 직불금 예산은 전체 예산의 9.6%
  - '13년 기준 직불금 예산은 1조 원, 직불성 예산은 6,817억 원을 책정함.
  - 직접지불 관련 예산은 농림수산물식품 분야 예산 중 '03년 9.8%에서 '12년 16.1% 차지함.
  - 이 중 직불금 예산은 9.6% 비중 차지, 직불성 예산은 6.5% 비중 차지함.

[표 8] 농림수산물식품과 직접지불 관련 예산(2003-2012)

(단위:억 원,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림수산물식품	A	65,572	66,031	73,406	82,299	87,335	87,035	99,878	103,202	104,004	104,420
직불금+직불성	B	6,432	8,675	10,014	19,441	21,466	19,475	15,914	20,224	21,704	16,833
직불금 관련	C	5,131	6,061	7,886	16,900	18,106	15,467	10,364	14,944	16,267	10,016
직불성 관련	D	1,301	2,614	2,128	2,541	3,360	4,008	5,550	5,280	5,437	6,817
B/A(%)		9.8	13.1	13.6	23.6	24.6	22.4	15.9	19.6	20.9	16.1
C/A(%)		7.8	9.2	10.7	20.5	20.7	17.8	10.4	14.5	15.6	9.6
D/A(%)		2.0	4.0	2.9	3.1	3.8	4.6	5.6	5.1	5.2	6.5

자료 : e-나라지표 : 농업일반 예산 및 기금내역, 각연도, 농림수산물식품부(자체 집계)

주 : 1. 직불성 예산은 농어민 복지 관련 직불제(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농어 민건강보험료지원·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재해공제지원,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 취약농가인력지원, 기타 수산분야 지원 등 복지성에 가까운 예산)와 수산 관련 직불제를 의미함.

2.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



## ◆ 직접지불(직불성+직불금)관련 예산

- 우리나라 직불금은 공익형 직불제가 약 72%, 소득안정형 직불제가 18.6%([표 9] 참고)
  - '13년 직불금 총예산은 1조원으로 공익형 직불제는 전체 직불금 예산의 71.9%(7,199억 원), 소득안정형 직불제는 18.6%(1,858억 원), 구조개선 축진형 직불제는 9.6%(959억 원)을 차지함.
  - 전체 직불금 중 쌀 관련 직불금(고정+변동)은 '03년 98.5%에서 '12년 67.9%로 여전히 쌀 품목에 집중되어 있지만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보임.

[표 9] 우리나라 직불금 예산 추이(2003-2012)

(단위 : 억 원, %)

목 적	직불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공익형 (71.9%)	쌀소득등보전 (고정직불제)	4,809	4,810	6,026	6,986	7,171	7,116	7,088	6,650	6,195	6,181
	친환경농업(축산) 직불제	30	55	69	114	175	263	423	520	379	506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5	100	123	523	523	432	336	417	388	436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	-	6	6	10	26	96	157	139	76
	소계	4,844	4,965	6,224	7,629	7,879	7,837	7,943	7,744	7,101	7,199
소득 안정형 (18.6%)	쌀소득등보전 (변동직불제)	244	955	1,376	9,096	9,501	5,330	676	5,951	7,993	620
	FTA파해보전 직접지불제	-	-	-	-	10	1,000	400	250	250	600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	-	-	-	-	-	-	-	-	14
	발농업 직접지불제	-	-	-	-	-	-	-	-	-	624
	소계	244	955	1,376	9,096	9,511	6,330	1,076	6,201	8,243	1,858
구조개선 축진형 (9.6%)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43	141	286	175	113	300	845	699	623	659
	FTA폐업지원제	-	-	-	-	603	1,000	500	300	300	300
	소계	43	141	286	175	716	1,300	1,345	999	923	959
총합계		5,131	6,061	7,886	16,900	18,106	15,467	10,364	14,944	16,267	10,016
전체 직불금 중 쌀직불 비중		98.5	95.1	93.9	95.2	92.1	80.5	74.9	84.3	87.2	67.9

자료 : e-나라지표 : 농업일반 예산 및 기금내역, 각연도, 농림수산식품부(자체 집계)

- 주 : 1. 농림수산식품부예산 : 예산(일반지출)에 기금(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FTA기금, 축발기금, 수산기금) 직  
불예산을 합한 금액, '08년까지는 농업예산 기준, '09년부터는 수산예산 포함, '13부터는 농업예산 기준  
2.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08년부터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사업으로 통합됨.  
3. '12년부터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은 복지부로 이관,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은 복지부로부터 이관됨.  
4.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

○ 직불성으로 보조적 소득안정형 직불제가 22.8%, 복지형 직불제가 57.9%를 차지([표 10] 참고)

- 직불성 예산은 복지를 위한 보조지원 성격으로서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민 연금보험료지원, 농어업인 재해공제,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 등으로 구성됨.
- '13년 직불성 총 예산은 6,817억 원으로 보조적 소득안정형 직불제는 전체 직불성 예산의 22.8%(1,561억 원), 복지형 직불제는 57.9%(3,951억 원), 기타 직불제는 19.1%(1,305억 원)을 차지함.

[표 10] 우리나라 직불성 예산 추이(2003-2012)

(단위 : 억원)

목 적	직불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보조적 소득안 정형 (22.8%)	농작물재해보험	130	448	235	567	558	596	618	677	972	1,140
	가축재해보험	-	-	-	-	-	287	278	309	331	358
	송아지생산안정	-	-	-	-	-	149	641	118	68	63
	소계	130	448	235	567	558	1,032	1,537	1,104	1,371	1,561
복지형 (57.9%)	농어민 건강보험료지원	-	537	666	1,359	1,272	1,356	1,707	1,594	1,544	2,593
	농어민 연금보험료지원	-	-	-	-	761	884	917	940	869	924
	농어업인 재해공제	80	98	114	183	227	278	322	332	372	371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	302	224	157	268	411	406	406	310	0
	취약농가 인력지원	-	-	-	-	28	47	47	55	65	63
	소계	80	937	1,004	1,699	2,556	2,976	3,399	3,327	3,160	3,951
기타후계인력양성(19.1%)		1,091	1,229	889	275	246	0.0	614	849	906	1,305
총합계		1,301	2,614	2,128	2,541	3,360	4,008	5,550	5,280	5,437	6,817

자료 : e-나라지표 : 농업일반 예산 및 기금내역, 각연도, 농림수산식품부(자체 집계)

주 : 1. 직불성 예산은 복지지원의 보조적 성격으로서 소득안정형과 복지형을 임의로 구분함.

2. 기타는 후계인력양성, 수산관련 직불제를 포함함.

3.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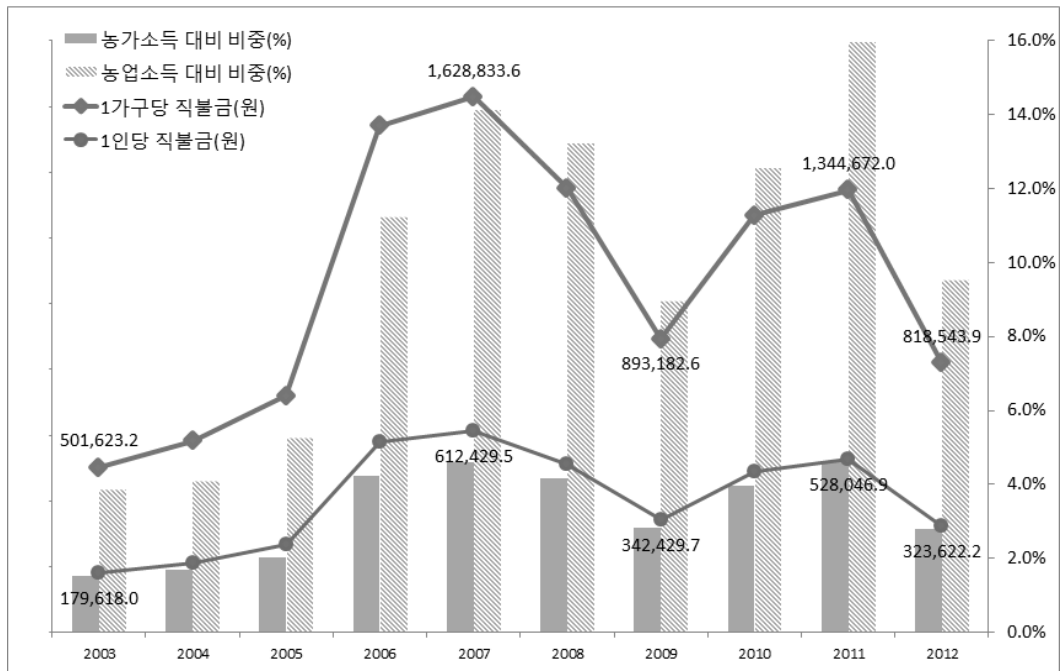
○ '06 - '07년에 농가당 · 인구당 직불금 수준이 가장 최고치를 기록한 후 계속 하락([그림 11] 참고)

- '03년 농가 1,264천 호, 농가인구 3,530천 명의 직불금 수준은 가구당 50만 원 대, 1인당 약 18만 원 대를 기록함.

- '12년 농가당 직불금은 약 82만 원, 1인당 직불금은 약 32만 원을 보이고 있음.
- '06 - '07년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후 하락, '09년 이후 조금씩 상승했으나 다시 하락 추세를 걷고 있음.

- '12년 기준 가구당 직불금은 농가소득 대비 2.8%, 농업소득 대비 9.5%에 해당
  - 직불금이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일반인의 시각은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그림 11] 농가당 및 1인당 직불금 규모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가수 (천호)	1,264	1,240	1,273	1,245	1,231	1,212	1,195	1,177	1,163	1,151
농가인구 (천명)	3,530	3,415	3,434	3,304	3,274	3,187	3,117	3,063	2,962	2,911

자료 : 1. 농가경제조사, 각연도, 통계청  
 2. 농림어업조사, 각연도, 농림수산식품부  
 3. e-나라지표 : 농업일반 예산 및 기금내역, 각연도, 농림수산식품부(자체 집계)

주 : 1.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  
 2. 직불금 예산 총액 기준으로 산정함(직불성 예산 기준 제외).

# ◆ 농림수산물식품 산업 규모 대비 직접지불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 농림업 산업 규모의 성장률 저하와 함께 직불금 예산 비중은 소폭 증가 ([표 11] 참고)

- 실질농림업GDP는 '03년 28.5조 원에서 '12년 25.1조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Delta 1.40\%$ 을 보이는 가운데 농림업 GDP 대비 직불금 예산은 '03년 2.2%에서 '12년 3.7%로 소폭 증가
- 실질농림업생산액은 '03년 40.7조 원에서 '12년 40.6조 원으로 연평균증가율은  $\Delta 0.04\%$ 로서 직불금 예산 비중은 '03년 1.6%에서 '12년 2.3%로 소폭 증가
- 실질 총농업소득액은 '03년 16.5조 원에서 '12년 9.8조 원으로 연평균증가율  $\Delta 5.5\%$ 로서 농가경제 현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실질 총농업 소득액 대비 직불금 예산은 '03년 3.8%에서 '12년 9.5%로 6%p 증가

[표 11] 농림업 규모 대비 직불금 예산 비중(2003-2012)

(단위 : 억 원,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림업GDP	A	285,588	304,843	274,738	268,626	255,459	237,322	240,329	246,290	254,250	251,448
농림업 생산액	B	407,99	444,812	421,288	413,045	396,868	419,699	442,793	435,233	415,520	406,529
총 농업소득액	C	165,130	178,241	174,686	170,880	141,858	123,816	119,352	118,885	97,899	98,835
직불금 예산	D	6,340	7,230	9,159	19,182	20,050	16,367	10,673	14,944	15,641	9,422
A/D		2.2	2.4	3.3	7.1	7.8	6.9	4.4	6.1	6.2	3.7
B/D		1.6	1.6	2.2	4.6	5.1	3.9	2.4	3.4	3.8	2.3
C/D		3.8	4.1	5.2	11.2	14.1	13.2	8.9	12.6	16.0	9.5

자료 : 1. 국민계정, 각연도, 한국은행

2. 농림업생산지수, 각연도, 농림축산식품부

3. 농가경제조사, 각연도, 통계청

4. e-나라지표 : 농업일반 예산 및 기금내역, 각연도, 농림수산물식품부(자체 집계)

주 : 1.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

2. 총농업소득액은 농가가구당 농업소득을 해당연도 농가수로 곱하여 산출, 추정함.

## 4. 직접지불제 문제점 및 대안<sup>5)</sup>

### 1) 직접지불제 유형별 문제점

#### ◆ 공익형 직접지불

##### ○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고정직접지불금)

- 당초 제도 개념 및 취지가 공익형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변동직불금과 같이 운영되면서 소득안정이라는 개념으로 혼동하여 오해가 발생함.
- 면적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소농에 비해 경지면적이 넓고 소득이 많은 대농에게 혜택이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임 (농가 양극화, 대농과 소농 형평성 문제).
- '07년 직불금 부당수령사태가 적발된 이후 방지를 위하여 까다로운 신청 및 확인 절차, 매년 서류를 중복 제출 등 행정 운영에 있어서 낭비가 발생함.
- 직불제 예산 중 쌀 고정직불금 차지 비중은 약 70%로 불균형적 지원이 이루어짐.

#####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sup>6)</sup>

- 관행농법에서 친환경농법(유기농의 경우 5년)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한 제약으로 실질적 소득 보전 효과가 반감됨.

5) 직접지불제 문제점 및 대안 부분에서는 각종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신문기사, 칼럼 등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핵심사항들을 정리하였고 주체별로 다양한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내용 중심으로 다루고자 함

6) 자료 : 정승 외(2009)

-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전체 농가의 친환경농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한계로 인해 지원농가에 대한 체계화된 관리시스템 미흡
- 단지 친환경농법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성격으로만 이해함으로써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원적·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공공재) 보상 성격 부족함.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sup>7)</sup>

- 법정리 단위의 마을공동기금 조성(수령액의 30% 공제)으로 인하여 타 직불금에 비해 농가당 실수령액이 낮아 농가소득 보전에 실효성 제기됨.
- 조건불리지역 내 농업의 진흥보다는 마을 활성화 실천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직불제 원래의 목적과 취지 불투명해지고 있음.
- 마을공동기금의 활용 또한 마을회관 혹은 마을안길정비 등 하드웨어적 사업에 치중되고 있고 조성액이 적은 경우 사용에 애로사항이 발생 함.
- 마을 활성화 실천 활동에 있어서 상호이행조건 준수가 소홀해지고 있는 상황임.
- 조건불리성 기준을 경지율과 경사도로만 판단하여 극히 제한적인 운영 구조가 됨.
- 타 직불제와 비교하여 엄격한 농지제도 기준 적용으로 인한 제도 실효성 의문이 제기됨.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sup>8)</sup>

- 마을경관보전활동 등을 통하여 경관형성 및 유지에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있으나 수혜대상자들은 경관작물로의 대체에 대한 소득보전으로 잘못 인식, 오해가 발생함.
- 신청 시 마을경관보전 협약체결(1년) 및 활동 세부추진계획서 작성, 경관

7) 자료 : 김태곤 외(2009)

8) 자료 : 김미영 외(2009)

활동비 사용범위 지정되어있으나 계획서 상에 표기된 상호이행조건 대부분 준수하지 않음.

- 축산물용 사료작물의 경우 일반 작물과는 달리 경관보전의 목적 이외의 혜택이 있으나 일반 작물과 동일한 지급방식으로 형평성 문제 제기됨.
- 새로운 경관작물이 도입됨에 따라 작물의 재배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 혹은 참여농가의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아 관리시스템,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아쉬움
- 타 직불제와 중복수혜 불가하여 지원적격자 부족, 예산규모도 적게 책정됨 (0.7%).

#### ◆ 소득안정형 직접지불

##### ○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변동직접지불금)

- 목표가격 선정에 있어서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보전율은 85%로 책정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산정기준, 현실적인 목표가격 수준 미흡함.
- 본래의 취지인 소득안정의 효과가 절감 현상 발생하여 오히려 직불금으로 인해 소득보전이 아닌 소득하락의 결과 초래하고 있음.
- 직불금의 인상과 동시에 쌀 재배면적 증가로 생산과잉되어서 오히려 쌀가격이 떨어지는 현상 발생, 생산연계성이 불가피한 구조로 흐르고 있음.

##### ○ FTA피해보전 직접지불제

- 농가 입장에서는 발동기준가격과 피해액 산정에 있어서 현행 발동기준 가격인 평년가격의 90%와 피해보전을 90%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품목에만 피해보전금이 지급되기에 피해품목 설정에 있어서 대체작목 재배농가의 불만 상시 존재함.
- 직불금 지급규모, 지급기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농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감, 직불금 산정공식이 난해하여 수혜자인 농민이 이해하기 힘들.

○ 발농업 직접지불제

- 제한된 품목에 한해서 지원이 이루어져 실제 혜택을 받는 농민이 많이 없기에 정책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됨.
- 쌀 고정직접지불금, 친환경농업·조건불리·경관보전 직불금 받는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정책수요자 선정에서 한계가 발생함.
- 초기 시행단계로 인해서 예산의 급진적 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지급 단가 역시 ha당 40만원의 낮은 수준이며 농가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임.

◆ 구조개선촉진형 직접지불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sup>9)</sup>

-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으로 일할 수 있는 농촌의 인력을 인위적으로 정리함에 따라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는 비판받음.
- 수혜자의 은퇴 후 소득보전 등 사후 안전장치가 미흡한 구조조정으로 실질적 은퇴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함(영농활동 지속하는 것이 직불금 수혜보다 큼).
- 신청 대상연령을 70세 이하로 제한을 두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농촌의 현실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 설정이라는 평을 받고 있음.
- 홍보 및 교육 부족으로 인해 변경된 지원기준을 인식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 FTA 폐업지원제

-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취약한 관계로 폐업지원금을 수혜받은 농가는 아무런 처리조항이 없어 폐업과 동시에 타인에게 시설양도,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함.

9)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2012)



## 2) 직접지불제 문제점에 따른 대안

○ 현행 직접지불제의 문제점에 따른 간략한 대안을 제시하면 [표 12]와 같음

[표 12] 문제점 및 대안 제시

직불제명	문제점	대안제시
쌀소득등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제도 개념 및 취지에 대한 오해 제도 목적과 수단, 결과간 불일치	공익형 성격에 맞게 수단을 활용하는 운영적 측면 제고, 주체별 인식의 변화 필요
	대농과 소농의 형평성 문제 야기 농가 양극화 현상 초래	면적단위 지불이 아닌 농가의 인원수에 따라 지불 하는 정책 실시(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시행)
	복잡한 절차, 기준 등 행정낭비	자격요건의 변화가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증빙 서류 제출 면제, 농번기 파한 신청일 조정 등
	쌀 품목에 치우친 직불제	식량자급률 제고 측면에서 국가 단위 기초식량작 물 포함해 다양한 품목을 고려한 제도의 시행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농법 변환 시 지급기한의 제약으로 인해 소득보전 효과 반감	최초 지급기간을 5년으로 설정, 하위에서 상위로 농법 변환 시 상위단계부터 새롭게 지급 시작
	체계화된 관리시스템 미흡	민간 인증기관 지정, 사군부에 관한 부여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의 한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연계한 시각으 로 접근하고 공공재적 보상 성격 지원 방식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낮은 실수령액으로 소득보전 미흡	조건불리지역 내 농업생산성 차액에 대한 보전과 농업의 진흥을 위한 방향, 수령액 상향 조정
	제도의 목적과 취지 불투명	신규 소득원 작물개발, 선진농업 연구, 농기계 구입 등 다양한 농업진흥용도의 사용처 개발
	적은 마을공동기금조성 규모 및 제한적인 활용 범위	직불금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으로 소프트 웨어 성격의 사업에 활용 마을공동기금을 활용한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
	상호이행조건 준수 소홀	중간지원조직 가구의 설립과 이를 통한 운영 실시 현장에 가까운 읍면단위의 인력보강
	제한적 지급기준 설정	농촌사회학 측면에서의 지표 - 인구감소율, 인구 밀도 등 인구속성 고려 - 추가한 지급기준안 마련
	엄격한 농지제도 기준 적용	실제 경작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농지 취급완화를 통하여 정책효과 제고 필요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수혜대상자의 잘못된 인식과 오해	본래의 목적(마을경관 형성 및 유지)에 부합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주민교육
	상호이행조건 준수 소홀	사업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전 교육, 홍보 포함한 구체적인 지침서 마련
	재배작물과의 형평성 고려 부족	동계, 하계작물 구분보다 경관 효과 기준으로 하는 등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지역별 특색 반영
	사업관리 및 정보공유, 관리시스템 구축 미흡	관리매뉴얼 공급 및 공무원 지식정보 교류 활성화
	중복수혜 불가원칙으로 제한적인 지원대상	농촌관광 및 지역축제 등 직불금과 연계하여 시너 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우선 지원

[표 12] 문제점 및 대안 제시 (계속)

직불제명	문제점	대안제시
쌀소득등보전 변동직접지불금	현실적 수준의 목표가격 미흡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목표가격의 설정 현재 5년 주기의 목표가격 산정시기 완화
	소득안정 효과 절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필요(가격기준, 시기조정, 거시경제 지표의 활용과 참고)
	생산과잉으로 인한 쌀가격 하락 생산연계성 불가피한 구조	목표가격의 중장기적 운용방안 수립 다양한 품목 확대를 유도하여 쌀 생산과잉 해결
FTA피해보전 직접지불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발동기준 및 피해액 산정	발동기준가격 : 평년가격 기준을 95% 상향조정 피해액 산정 : 피해보전비율 95% 상향조정, 그 외 수입기여도 상향 조정
	직접적 피해품목 설정에 한계	직간접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대체품목 가격하락 연계성 조사를 통한 실질적 피해보상 실시
	농가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직불금 지급규모 및 지급기준 설정	관세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율을 조정계수 상향조정 통해 보전,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 실시
발농업 직접지불제	제한된 품목설정으로 인한 정책 실효성 의문 제기	국가 차원의 식량자급률 제고 차원에서 접근 자급대상 품목에 제외된 작물 중 지역농업에 근 간이 되는 비중이 높은 품목 조사실시 후 추가
	중복수혜 불가원칙으로 제한적인 지원대상	친환경농업직불금과의 중복수혜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 보완
	적은 예산규모로 인한 체감도 저하	최소한의 농업경영비 수준을 고려한 지원단가의 상향조정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인위적 농촌인력정리에 따른 사회적 손실	안정적 소득지원제도의 마련 농촌지역 연금보험료의 정부지원확대와 더불어 안정적 연금소득원 지원
	고령농 은퇴 후 안전장치 미흡	규모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후 제도적 관리시스템 구축
	실질적인 소득보전 효과라고 보기에 부족한 직불금 규모	고령화가 높은 농촌현실 감안한 연령 기준 확대 은퇴 후 소득원으로 자리매김기 위한 지원 확대
	홍보 및 교육의 부족	농어촌공사와의 업무 협약을 통한 법제도 개선
FTA 폐업지원제	취약한 사후 관리프로그램	폐업지원 시설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
	도덕적 해이 발생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교육사업 강화 대체품목 재배에 대한 정보제공과 컨설팅 지원

## 5. 시사점

- 우리나라 농림업 부문은 국가 전체 산업 규모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있음.
- 농가경제 현실은 총부가가치 창출에서 낮은 기여,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감소, 농가교역조건지수 악화, 도시가구 소득 대비 낮은 수준, 가계지출은 증가 추세임.
- 각종 경제지표의 연평균 증가율 비교에서도 농업분야 지표만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중임.
- 농촌생활 현실은 하드웨어 환경은 개선되었다고 느끼고 있으나 공동체 의식, 소득원 창출, 농촌경관 유지 등 소프트웨어 환경 개선은 부족하다고 인식함.
- 향후 농촌정책의 수요는 농촌 환경 및 경관개선에 대한 관련 정책발굴, 복지지향적 정책, 일자리 창출,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발전 관련 정책 등을 꼽음.
- 도시민과 농어업인 모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해 공감도가 확산되고 있지만 도시민들의 세금부담 의향에서는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다양한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됨.
  - 직불제별 유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목적(소득 및 경영안정)을 지향

- 한정된 예산 내에서 다양한 직불제 시행으로 인해 지원단가 부족, 집중도 저하
- 현재 직불금은 농가의 소득 수준을 보전·향상시키기에는 미흡하므로 수혜자 만족도 저하, 반면 일반 도시민들의 직불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상반된 현실)
- 쌀 농가 소득지지 중심인 직불제 예산편성으로 인해 다양한 품목 지원의 한계
- 쌀 직불제의 경우 생산연계성 현상 발생으로 농가간 양극화 초래, 형평성 제기
-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영역의 한계 노출
- 다양한 직불제 시행으로 사후의 종합적 관리 시스템과 운영 측면에서 애로
- 상호준수조건 이행에 대해 농업인 역시 중요성 간과, 관리 감독 미흡한 현실
- 지역별 특성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지방정부의 역할·기능 한계

▶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직불제는 농업인, 소비자, 공무원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임.

○ 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음.

- 향후 개방확대와 함께 직접지불금 지급 증가가 전망,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직불제 통합·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안)의 기본 골자(농식품부, 2012)
- 직불금 목적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다양한 제도를 통합하고 단순화함 필요
- 농업·농촌 정책영역들과의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직불제와 관련한 지원제도(교육, 컨설팅)를 결합하여 종합적 프로그램 방식으로 재구성
- 쌀 농가 중심, 생산연계적 틀에서 벗어나서 국가 차원의 식량자급률 제고 차원에서 다양한 품목과 다양한 영역(고령인력의 복지 수요)으로의 확장 필요
- 예산 확대는 물론이고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중도와 사업 효과성 달성

- 국가 전체 양적 성장 규모 대비 감소한다는 이유로 농업에 대한 예산 감소와 직불금 축소를 제기하는 시각에 대해 대국민에게 세련된 방법으로 홍보 강화
- 수혜자 또한 상호준수조건 이행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특성과 역할의 강조
- 국가 농정의 장기적 비전 구상 하에서 직불제를 접근하되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고려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설계가 필요
  - 한 국가가 어떻게 농정의 최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수단으로서의 직불제를 도입, 정책설계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따라 정책효과가 극명한 차이 발생
  - 농정 목표에서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라는 것을 전면 내세우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강조
  - 즉, 소득수준의 직접적 보전뿐 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그에 대한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개선 필요
  - 예로서 농촌공동체의 회복, 농촌 일자리 창출, 농촌환경 및 농촌경관 보전 측면을 반영한 직불제 도입 등을 검토

## ◆ 참고 문헌 ◆

### 보고서 및 논문

경영이양직불 보조금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2012,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  
김동원 외(2012),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25.  
김미영 외, 2009,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농촌지도와 개발, 16권 4호, pp. 373-867.  
김태곤 외, 2009,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120.  
정승외, 2009, 친환경직접지불제의 평가와 개선방안-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와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정책연구, 36권 3호.  
직접지불제 현황, 2012, 통계청&e-나라지표  
최경환, 2012,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대한민국정부

### 통계

가계동향조사, 각연도, 통계청  
국민계정, 각연도, 한국은행  
농가경제조사, 각연도,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각연도, 통계청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1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어업조사, 각연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업 생산지수, 각연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일반 예산 및 기금내역, 각연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생활지표조사, 2011,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소비자물가지수, 각연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연도, 통계청

###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농민신문 <http://www.nongmin.com>  
농수축산신문 <http://www.aflnews.co.kr/aflnews/>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http://www.naas.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  
WTO 홈페이지 Agreement on Agriculture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4-ag\\_01\\_e.htm](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4-ag_01_e.htm)

강 마 야, kmaya@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Tel. 041-840-1210

여 민 수, ch62minsu@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연구원

Tel. 041-840-1127

※ 본고 이후 직불제 제도 개선 관련 시리즈 II(해외선진국 사례와 동향), 시리즈 III(직불제 제도 개선안)를 연속으로 발행할 예정임

## 충남리포트 발간리스트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08-01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	송두범	2008. 1.21
2008-02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 과제	강영주	2008. 2.22
2008-0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이충훈·권영현	2008. 3.19
2008-04	국가적 도시재생연구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조봉운·송두범	2008. 5. 2
2008-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	송두범·강영주	2008. 5.27
2008-06	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이관률	2008. 6.19
2008-07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신동호·강영주	2008. 7.30
2008-08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분석	백운성	2008. 8.29
2008-09	충남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시·군별 균형발전 평가	원준문·강영주	2008. 9.30
2008-10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	백운성	2008.10.30
2008-1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	오용준	2008.11.28
2008-12	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	정옥식	2008.12.30
2009-01	충남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강영주	2009. 1.30
2009-02	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연계 발전전략	한상욱	2009. 2.24
2009-03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정종관	2009. 3.11
2009-04	바람직한 금강 하구역 개선을 위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	전승수·한상욱	2009. 3.18
2009-05	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	오석민·한상욱	2009. 4.24
2009-06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	이인배	2009. 5. 8
2009-07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임준홍	2009. 6.29
2009-08	태안군 녹색성장메카 육성을 위한 환경생태관광의 여건과 발전전략	이인배	2009. 7.23
2009-09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최인호	2009. 8. 6
2009-10	로컬푸드의 실태 및 충남의 실천과제	윤병선·유학열	2009. 9. 7
2009-11	충남 전통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전략	임준홍·이상준외	2009. 9.30
2009-12	지역 통계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	조한석·백운성	2009.10.30
2009-13	충남 농수산물 수출실태와 활성화 전략	임형빈·유학열	2009.11. 9
2009-1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김용웅	2009.11.18
2009-15	충남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재완·이관률	2009.12.11
2009-16	대전·충남의 금융산업과 지역발전	류덕위·김양중	2009.12.31
2010-01	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	임준홍·조수희외	2010. 1.29
2010-02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2.24
2010-03	충남의 지역경제 개관 -사회계정행렬(SAM)을 통한 분석	임재영	2010. 3.10
2010-04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 II	이용재·임준홍	2010. 3.18
2010-0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II	이충훈·권영현	2010. 4. 5
2010-06	아·태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충남의 정책적 시사점	최병학	2010. 4.30
2010-07	중국 시장에 대한 충남의 수출경쟁력 분석	김양중	2010. 5.10
2010-08	충남 도시농촌 교류정책의 현황 및 과제	송두범	2010. 5.27
2010-09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6. 3
2010-10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충남 연안역에 미치는 영향	장동호·윤정미	2010. 6.21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0-11	충남 귀농·귀촌 실태 분석과 과제	유학열	2010. 8. 9
2010-12	충남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신동호	2010. 8.16
2010-13	충남 지역경제 10년과 과제(1998년-2007년)	임재영	2010. 8.19
2010-14	기후변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정책	이인희	2010.10. 6
2010-15	사람중심,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	조명래·임준홍외	2010.10.29
2010-16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임준홍·김양중외	2010.11.09
2010-17	충청광역경제권의 산업간 연계구조 분석	임형빈	2010.11.16
2010-18	충남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과 과제	오용준	2010.12.30
2011-01	경관법 개정에 따른 충남도 및 시·군의 대응방안	한상욱	2011.01.13
2011-02	2011년 충남의 GRDP 전망	김양중·이선희	2011.02.10
2011-03	고령화시대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이충훈	2011.03.31
2011-04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우선보전 연결구간 선정	사공정희	2011.04.21
2011-05	상권활성화제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임준홍 외3명	2011.05.02
2011-06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이상진·김영일	2011.06.23
2011-07	민선 5기 충남도정 1년을 말한다	성태규외	2011.06.30
2011-08	충남 항만 이용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1.07.11
2011-09	박쥐 복원의 필요성과 방안	정옥식	2011.07.27
2011-10	충청남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	성태규	2011.08.22
2011-11	기업과 지역주민 간 상생·협력 방안 연구	김양중	2011.10.31
2011-12	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지정책의 개선방안	홍성효	2011.11.30
2011-13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정책과 대응방안	이인희	2011.12.29
2012-01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김종수	2012.01.31
2012-02	국내외 농공상 융합기업 지원정책 동향과 시사점	신동호	2012.02.13
2012-03	2012년 충남의 수출입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4	2012년 충남 GRDP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5	충남 가구 주택 특성과 정책방향	임형빈	2012.03.12
2012-06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과 협동조합	송두범·김종수	2012.04.02
2012-07	충청남도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김영일	2012.05.31
2012-08	충청남도 전원주거단지 정주실태 분석	조영재	2012.06.21
2012-0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충남의 특화산업 분석과 선정	전영노·백운성외	2012.08.10
2012-10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	허남혁·정준	2012.08.16
2012-11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	윤정미	2012.09.20
2012-12	농업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공생을 위하여	정옥식	2012.10.31
2012-13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통한 도심녹지체계 확보	사공정희	2012.11.28
2012-14	한·중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양중	2012.12.12
2013-01	충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 특성분석과 정책수요 도출	홍성효 외	2013.02.21
2013-02	2013년 충남 수출 및 GRDP 전망	김양중	2013.03.07
2013-03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실태조사와 해결과제	송두범 외	2013.04.19
2013-04	에코유지임을 통한 충남 자연환경의 보전 방안	여형범	2013.04.29
2013-05	충남지역 귀농·귀촌 실태 비교 연구	유학열	2013.05.10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http://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